

Vol. 6

2023.06. 13.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11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최지수전임 jschoi@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최종 물품의 생산자가 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산정 시 대체공휴일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유무역지역 국외 반출 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편의성 제고 (제10조)	비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 (제17, 18조)	최종 물품의 생산자가 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산정 명확화 (제11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산정 시 대체공휴일이 제외됨을 명확화 함.

(3) 시행일

‘23.05.01.

I. 법령 개정사항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판매나 영업 목적으로 수입되는 목재나 목재제품 중 수입신고 대상을 추가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를 함께 명시해 수입신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목재생산업자의 시설 유지 부담을 줄이고 신규 목재생산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 추가 및 수입신고 효율성 증대 (제18조의3)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되어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단판, 섬유판, 목재펠프 등을 추가함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를 수입신고 대상 목재 및 목재제품의 품목명과 함께 명시함.
목재생산업자의 시설유지 부담 경감 및 신규 업자의 진입장벽 완화 (별표2 제3호)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아 목재생산업자의 시설 유지 부담을 줄이고 신규 목재생산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임.

(3) 시행일

‘23.05.16.

I. 법령 개정사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 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관련 사항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제8조의6)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의 예방접종 유급휴가 조항 신설 (제32조의2)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의 역학 조사 필요서류 제출 요구 조항 신설 (제18조의4, 제79조의2)	시·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함.

(3) 시행일

'23.05.19.

I. 법령 개정사항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서류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밀검사를 받은 수산물에 정밀검사 생략 조건에 해외제조업소가 같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대행 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신고 시, 서류검사 효율성 증대 (제27조, 제33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사진을 추가함.																							
수산물 정밀검사 생략 대상 조건 추가 (별표10, 부칙 제3조)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국·품명·수출업소가 같으면 5년 이내 다시 수입할 때 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던 것을 해외제조업소가 같다는 조건을 추가함.																							
수입신고 대행 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거나 허위서류 첨부 등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마련 (별표13)	<div>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div> <table><tr><th rowspan="2">위반사항</th><th colspan="3">행정처분 기준</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r><tr><td>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td><td></td><td></td><td></td></tr><tr><td>1) 제조일자(유통기한) 또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td><td>영업정지 1개월</td><td>영업정지 2개월</td><td>영업정지 3개월</td></tr><tr><td>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또는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td><td>영업정지 5일</td><td>영업정지 10일</td><td>영업정지 15일</td></tr><tr><td>3)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td><td>영업정지 1개월</td><td>영업정지 2개월</td><td>영업정지 3개월</td></tr></table>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1) 제조일자(유통기한) 또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또는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3)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1) 제조일자(유통기한) 또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또는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3)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시행일

’23.05.26.

II. 입안예고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HS 8421.21-9020)를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하고 AEO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며, 사후관리 위탁대상 물품을 명확화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 개선안 반영	1) 용도 외 사용 우려가 낮은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해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 (별표 1의 가 → 별표 1의 나) 2) 자율사후관리업체(AEO)가 수입한 부분품·원재료에 대해 최대 3년간 사후관리 하던 것을 1년 이내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기간 단축
사후관리 위탁대상 물품 명확화	1) 기존 위탁대상물품인 할당관세 적용 사료(P1) 외에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W1)를 수입추천기관 위탁대상물품으로 추가*하여 위·수탁 기관 간 관리대상 통일 * [사유] 관세청 고시 상 위탁대상 : P1 // 농림부 고시 상 수탁대상 : P1 + W1 ⇒ 고시개정을 통해 위·수탁기관 간 관리대상 물품 일치 (P1, W1 모두 위·수탁 관리)

(3) 시행 일자

'23. 07.01. 시행 예정

II. 입안예고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품질책임자 제출자료 및 경미한 변경허가 보고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질책임자 제출자료 명문화 (안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조·수입업허가 신청 시 품질책임자에 관한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혼선이 야기되어, 품질책임자의 자격 및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한하여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함
경미한 변경허가 보고기간 합리적 개선 (안 제24조)	분기 내에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허가증에 반영이 되지 않아 수입 통관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수시보고제를 도입하고 보고기한을 연장하여 보고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다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중처분 명확화 (안 별표 1, 2)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처분의 경우, 무거운 처분 이외에 나머지 각각에 대해 기간을 산정하도록 처분기준 명시함
허가증 등에 ‘유효기간’란 신설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 지 제8호서식)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허가·인증·신고에 5년의 유효기간을 부과하는 갱신제가 시행됨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증·인증서·신고증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함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갱신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시행 일자

’23년 중 시행 예정

II. 입안예고

3.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의 대상, 신청절차 또는 자료요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정 목적 (안 제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신청절차 또는 자료 요건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 범위 제정 (안 제2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의약외품 제조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적합판정 기준 및 요건, 신청절차 등 (안 제3조, 제4조)	1) 적합판정 기준(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제정 2) 적합판정 신청 및 자료 요건을 정함
적합판정, 보완 요구, 적합판정서 발급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1) 적합판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 처리기간, 적합판정 유효기간 제정 2) 적합판정에 따른 보완 요구 절차 및 적합판정서 발급에 대해 제정

II. 입안예고

구분	내용
변경적합판정, 유효기간의 연장, 적합판정서 재발급 절차 등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1)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적합 판정, 적합판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제정 2) 적합판정서를 분실 또는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절차 제정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등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	1) 적합판정 표시, 정기 수거 검사 제외 등 우대조치 제정 2)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미준수 업체에 대한 시정지시, 수시 확인 조사 등 사후관리 등 제정

(3) 시행 일자

'23년 중 시행 예정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PLUGGING INK)을 인쇄용 잉크가 분류되는 HSK 제 3215.19-0000 호와 그 밖의 매스틱이 분류되는 HSK 제 3214.10-1090 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 2017.1.16.부터 2021.7.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인쇄용 잉크가 분류되는 HSK 제 3215.19-0000 호(관세율 3.3%~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함.

나. 처분청이 2021.9.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밖의 매스틱'이 분류되는 HSK 제 3214.10-1090 호(관세율 6.5%)임을 전제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21.11.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2021.11.1.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2021.12.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 3214.10-1090 호로 회신함.

다.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적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및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7. 및 2021.12.3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2022.1.12. 위 가산세 면제신청도 불승인 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은 에폭시 수지와 탄산칼슘을 기본재료로 조제한 고점도·페이스트 상태의 물품으로 무기질인 탄산칼슘은 색상을 표현하는 안료라기보다 PCB 홀을 메꾸기 위한 충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매스틱이 분류되는 HSK 제 3214.10-1090 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3) 결정일

2023.03.31. (조심 2022 관 0077)

Ⅲ. 조세심판사례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자신의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관계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사용하게 한 경우, 이를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1.3.11.부터 2021.10.5.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연합회에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 함.

나. 2021 년 국정감사에서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추천대상자 관리 소홀로 관세포탈 의혹이 제기되자, 처분청은 할당관세 추천업무 담당인 연합회 및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폴리에틸렌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연혁 및 그간 추천과정, 추천실적,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 등 구비 서류 등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함.

다. 처분청은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구비서류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전량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신청하면서 용도내 사용각서(직접 원료 사용, 제 3 자 제공 또는 양도 불가능 기재)를 작성·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관세법」 제 270 조 제 1 항 제 1 호(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고발하는 한편,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율(0%) 적용을 취소하고 할당관세율(6.5%)과의 차이에 따른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을 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2.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청구법인이 추천기관에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신청하여 수입하면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그로 하여금 생산에 사용하게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실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음.

(3) 결정일

2023.03.31. (조심 2022 관 0129)

Ⅲ. 조세심판사례

3.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1.4.3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호주 FTA 에 따라 매년 12 월 1 일부터 익년 4 월 30 일까지 수입되는 신선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0%(S-1 저세율)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고, 세관장은 2021.5.6. 이를 수리함.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2021.5.1. 우리나라에 입항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S-1 저세율이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적용된 S-1 저세율을 배제하고 매년 5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000 로부터 수입되는 신선감자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141.8%(S-1 고세율)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을 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2.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한·호주 FTA 및 관세법령 등에 비추어 수입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시점은 쟁점선박이 우리 영해에 도달하고 최종 입항보고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로 볼 수 없음

(3) 결정일

2023.05.18. (조심 2022 관 0140)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Vitamin D 1000 IU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
물품 설명	아마씨유에 비타민 D를 혼합하여 조제한 후 연질 캡슐에 넣어 섭취하도록 만든 건강보조식품(205 mg×250 캡슐)
HS CODE	- 변경 전 : 제 1517.90-9000 호 (기본관세 8%) - 변경 후 : 제 2106.90-9099 호 (기본관세 8%)
변경 사유	다량의 아마씨유는 지용성인 비타민 D를 보호하고, 일정 섭취량으로 비타민 D를 희석하기 위한 보조적 물질이므로 식물성유보다는 식이보조제의 일종으로 보아 제 2106.90-9099 호로 분류 (제 2023 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5.3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 MAGNETIC FLUID SEAL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MAGNETIC FLUID SEAL; HOLLOW SHAFT FLANGE MOUNTED SEAL;;자성유체실;;; HF015NC M01
물품 설명	자성유체(자성 미립자+계면활성제+베이스 오일)를 이용해 실막(액체오링)을 형성하여 대기영역과 진공영역을 밀봉하는 실(Seal)
HS CODE	- 변경 전 : 제 8484.20-0000 호 (기본관세 8%) - 변경 후 : 제 8487.90-9090 호 (기본관세 8%)
변경 사유	스프링의 힘을 이용해 접촉면을 기계적으로 밀봉하는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과는 달리 액체상태의 자성 유체를 이용해 밀봉하는 방식의 실(seal)이므로 제 8487 .90-9090 호로 분류 (제 2023 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5.3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3. COMBINATION FILTER 등 3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ASSY A-0001 ②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28300318 ③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18300018
물품 설명	합성섬유(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한 후 프레임을 부착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용)
HS CODE	- 변경 전 : 제 8421.99-9099 호 (기본 관세: 8%) - 변경 후 : 제 5911.90-000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 등)로 테두리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품(부직포)에 있으므로 제 5911.90-0000 호에 분류 (제 2023 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5.3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4. PBN(Pyrolytic Boron Nitri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PBN 126MM DIA CRUCIBLE; 79095; U.S.A
물품 설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용 기기에 전용되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도가니 형상의 열분해 질화붕소(PBN) 제품
HS CODE	- 변경 전 : 제 6903.90-9020 호 (기본 관세 8%) - 변경 후 : 제 8486.90-3050 호 (기본 관세 0%)
변경 사유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전용되며,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소성(燒成; firing)하여 만드는 일반적인 제 69 류 도자제품과 달리 열분해하여 질화붕소를 생성시키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제 8486.90-3050 호로 분류 (제 2023 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5.31.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4-에이치오-디피티'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관리 강화
-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이로신(Psilocyn)’, ‘에티졸람(Etizolam)’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말-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 신규 지정 물질 5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입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응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람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식품 규제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

- 우리나라 주도의 세계 최초 식품규제기관장급 협의체 출범
- 아·태지역 식품 규제조화 위해 식품규제당국 간 국제 공조체계 구축
- 식약처, 식품 분야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 및 비관세장벽 해소 기대
- 호주, 뉴질랜드와 식품안전 협력 양해각서 3건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식품 분야 규제조화,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 논의를 위해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3)를 개최합니다.

* 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이번 행사에는 아프라스 회원국인 8개국* 식품 규제기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대표단,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 중국, 싱가포르

아프라스는 급변하는 식품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하여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입니다.

* 세계경제 블록화 등 식품 공급망의 개편, 디지털 혁신, 탄소 중립 등

아프라스는 각국 식품 규제당국 간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의장을 선출하며, 아프라스 설립과 운영규정(TOR)*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각국의 식품규제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전략 과제를 발굴하며, 참여국과 공동으로 '아·태 지역 안전한 식품거래 환경 조성'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관계 공고화'를 담은 아프라스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아프라스 설립 목적, 구조, 회의 운영 방식, 절차 등을 규정

한편, '식품안전 분야 협력 증진 및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이 활발한 호주, 뉴질랜드와 협력약정(MOU) 체결식도 진행됩니다. 호주 농림수산업부(DAFF)와 식품안전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과는 위해평가 정보공유와 식품위생 이슈 신속 통보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협력약정을 갱신합니다.

또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전자위생증명 사용 협력약정서」를 체결하여 수출입식품에 전자 위생증명서 전환과 수입식품 안전 정보 공유에 관한 협력도 강화합니다. 이번 약정으로 국가 간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은 증대되고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어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신속 수출 지원 위한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 개선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으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던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5월 12일 개정·시행합니다.

*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이번 개정은 식약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57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처리기한을 15일 단축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7. (민생불편·부담 개선) 수출용의료기기 민간단독심사로 신속수출지원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 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범정부 수출유망 품목 지원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한다

- 23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수출 유망품목 30개 집중 지원
-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활용 등을 위한 대중(對中) 수출확대 지원방안 마련
-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해외인증 종합지원 방안 등 논의

정부가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 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3대 분야(①신성장제조업, ②소비재, ③디지털·그린 전환)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설비 이전, 국내 투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한편, '30년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과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스위스와 바이오·통상 협력 강화

- 한-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방한
- 스위스 세계적 바이오제약사(社)의 한국 투자 협조 요청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스위스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바이오산업 및 통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기 빠를랭(Guy Parmelin)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스위스 양국 간 바이오·통상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고 양국 간 협력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라 설명하며, 스위스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스위스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위스는 노바티스(Novartis, 제약바이오사(社) 순이익 기준 세계 1위), 로슈(Roche, 순이익 4위), 론자(Lonza, 위탁생산 1위) 등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강국('21년 기준)

양측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와 관련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24. 2월, 아부다비)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기후·환경 등 양국 공통 관심의제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연합(EU) 미가입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체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23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 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 소량포장 공급 의무
- 소량포장 공급 대상 품목 중 1,681개 품목의 차등공급비율 확정
- 차등공급 8% 145개 품목, 5% 670개 품목, 3% 866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2023년 기준 20,810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 적용 비율을 정해 '2023년 소량 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습니다.

* ▲날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 하거나 제외* 하고 있습니다.

* 수출(관납)용/급여목록 비등재/희귀/퇴장방지/저가 의약품

식약처는 올해 소량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총 20,810개 품목을 공고해 업계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의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3~8%'로 조정했습니다.

<2023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현황>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률	공고품목수 (총 1,681 개 품목)
8%	145 개 품목
5%	670 개 품목
3%	866 개 품목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률 공고품목수 (총 1,681개 품목)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제도의 투명성·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공급대상 품목 선정'부터 '사후조치'까지 업무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업계가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7. 식약처, K뷰티 중국시장 재도약 발판 마련

- 중국 정부, 화장품 허가·등록 시 원본 확인된 국내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분야 한-중 기술협력 추진
-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합의, 워킹그룹도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지난 5월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①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②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③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④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①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판매증명서 :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 판매증명서 : 전자적 형태로 서명이 되어 즉시 발급·출력이 가능한 판매증명서

** 증명서에 기재된 발급번호, QR코드로 발급기관(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원본 여부 확인 가능

②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③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④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주요 화장품 수출상대국(규모 '21) : 중국은 전체 화장품 수출규모의 53%차지(1위)

① 중국(\$ 48.8억) ② 미국(\$ 8.4억) ③ 일본(\$ 7.8억) ④ 홍콩(\$ 5.78억), ⑤ 베트남(\$ 3.0억)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8. 5년 내 “배터리·소재” 5대 수출 품목으로 키운다

향후 5년 내 배터리 및 소재가 5대 수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이후로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자동차 등 7개*로 고정돼 있었다.

* 2010년 이후 5대 품목 :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석유화학, 기계, 선박, 철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25.(목)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을 방문해, 이차 전지 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과제들을 점검했다. 양극재 수출액은 지난해 2.6배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성장중이며, 배터리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금년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배터리 및 소재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❶수출품목 고도화, ❷수출품목 다변화, ❸수출저변 확대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수출품목 고도화를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니켈함량 95%이상), 실리콘 음극재(실리콘 함량 20%이상) 등을 개발한다.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LFP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ESS용 레독스 전지 등 삼원계외 배터리와 양극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글로벌 점유율이 35%에 달하는 LFP 배터리에 대한 R&D과제를 지난달 착수한데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도 신규과제를 기획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출 소부장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소부장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R&D 과제를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개발한 소재 등을 실제 배터리에 실증해 볼 수 있는 공용 인프라인 “배터리 파크”도 전국 5개소에 구축할 예정이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9.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

-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및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신설 -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기재위 심의 중),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산중위 심의 중)

먼저,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위험(리스크)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일본은 '20년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특정국 생산시설을 아세안 등 제3국으로 이전 시 지원

그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되었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0. 이번에 통과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의결
- 수입식품 전자심사 도입, 365일 24시간 자동 수입신고 수리 가능
-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
- 식품과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 행정적 지원, 장애인 알권리 보장
-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엄격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의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 수리하는 심사체계(일명 SAFE-* 24)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또한,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축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물성식품**까지 확대·실시합니다. 아울러,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직구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 수출국 안전관리시스템, 식중독균, 잔류항생제 등 관리실태 평가→국내외 동등 이상일 경우 수입하는 제도(현재 축산물만 시행)

** 동물성식품 :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 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아울러,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 합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위생용품 관리법」개정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는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법률안 개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개정 법률명	의결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일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자동 수입신고 수리 근거 마련	공포 후 3개월 경과
	동물성 식품(축산물인 아닌 동물의 식육·원유·알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도입	공포 후 1년 경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구매검사 및 소비자의 구매·사용 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공포 후 1년 경과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업무 확대 * (현행) 국내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 → (개정) 기존 + 수출업소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등	공포 후 6개월 경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항목의 기입 위반에 대한 벌칙(1년, 1천만원) 규정 마련 * (현행) 마약에 대해서는 벌칙(2년, 2천만원 이하) 규정이 있으나, 향정의 경우 의무는 있는 반면 벌칙은 부재	공포 후 3개월 경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처방시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처분), 단, 오남용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현행) 환자 투약내역 확인 가능(재량)	공포 후 1년 경과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개정 법률명	의결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재량)및 식약처장의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	공포 후 6개월 경과
	점자(코드)표시 등과 관련한 식약처장 행정적 지원 근거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 표시 권장하고, 표시하려는 영업자 대상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공포 후 1년 경과
	식약처장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 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시 개발·교육·홍보하고, 이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위생용품 관리법	치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에 포함 *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라 복지부 소관	공포 후 2년 경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 * (현행)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 소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내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4년)과 동일하게 1년 연장 * (현행) 3년 → (개정) 4년	공포한 날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1. 국민 안전에 타협은 없다!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는 우리가 최고

- 식약처장, 소비자,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방사능 검사 현장점검
- 일본산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철저 당부
-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방사능 안전 불안감 해소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소비자,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5월 25일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의 국내 수입 가능성에 대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확인하여 일본산 수산물 안전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점검 사항: ▲수입 수산물 관능검사 ▲검체 채취·운반 과정 ▲방사능 검사 현황 등

점검 현장에서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명게, 가리비, 참돔 등)과 15개현** 27개 농산물(버섯류, 쌀, 고사리, 대두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그 밖의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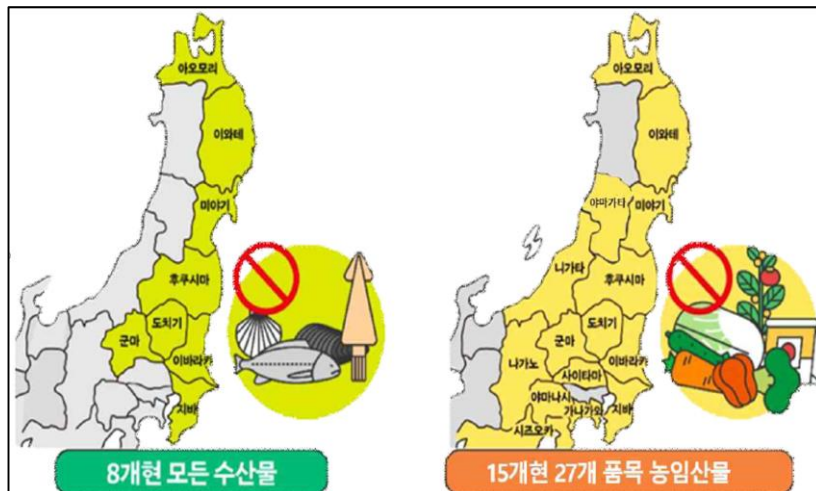
** 8개현 +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오유경 처장은 “국민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방사능 안전 정책이 현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 (radsafe.mfds.go.kr)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참고1. 일본산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현황>



-수산물: 8개현 모든 수산물 / 농산물: 15개현 27개 품목(버섯, 쌀, 대두 등)

<참고2. 지역(현)별 일본산 농산물 수입금지 품목>

구분	지역	수입금지 품목
1	후쿠시마현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땅두릅(독활)
2	지바현	엽채류, 엽경채류, 차, 버섯류, 죽순
3	도치기현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 두릅, 죽순,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밤
4	군마현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 오가피, 두릅
5	이바라키현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차, 버섯류, 죽순, 오가피
6	가나가와현	차
7	미야기현	버섯류, 청나래고사리, 죽순, 오가피, 고비, 메밀, 대두, 쌀, 고사리
8	이와테현	버섯류,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죽순, 메밀, 대두
9	나가노현	버섯류, 오가피
10	사이타마현	버섯류
11	야마나시현	버섯류
12	아오모리현	버섯류
13	시즈오카현	버섯류
14	니가타현	오가피
15	야마가타현	버섯류